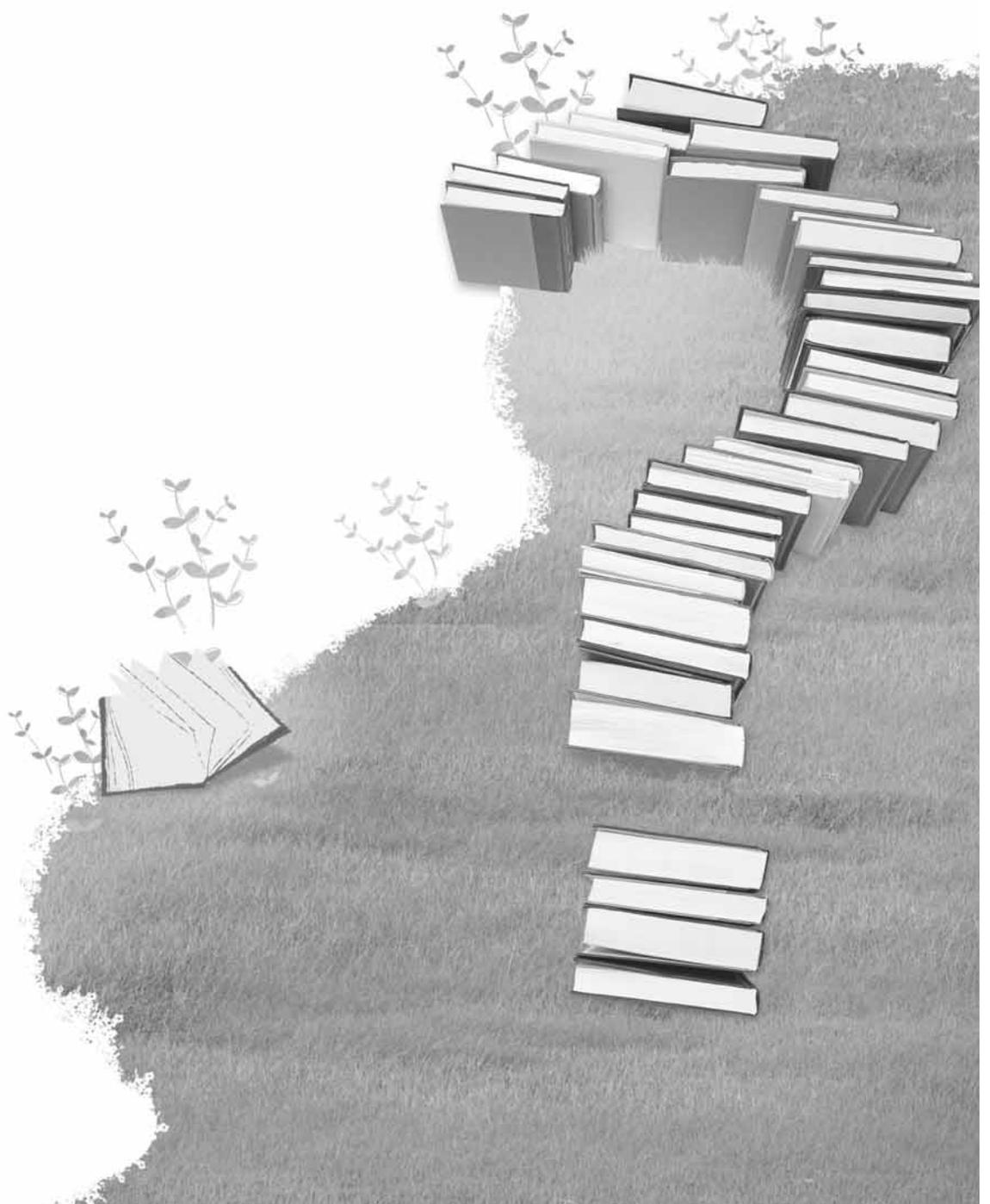


2013년도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활동 및 성과보고서



인 사 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준봉



한농연의 기반이며 힘의 원천인 각 지역 회장님들과 대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3**년의 막바지에 선 지금, 올 한해를 뒤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동부팜한농의 농업계진출 시도,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및 **TPP**참여관심표명, **2014**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감소 등 먹구름낀 농업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농연은 누구보다도 회원과 그리고 농업인, 더 나아가 모든 농촌과 농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3**년 한해 총 **12**번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44**건의 성명서 발표, 한·중 **FTA**중단 집회, 각종 기자회견과 간담회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농업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서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만들었으며, 동부팜한농의 유리온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중 FTA에 맞서 농업인의 단결되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어 '초민감품목에 최대한 농업부문을 포함'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 성명서를 내고 농업정책의 견제와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활동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복지와 내부강화를 위하여 회원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교류센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농업인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회원에 한걸음 다가가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 후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은 물론이고 정부와 농업계 기관, 단체, 업계 인사들을 만나오면서 한농연의 정책대안과 여러 사업에 대한 비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업·농촌과 우리 농업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로 뭉쳐 우리에게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우리가 동지애로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앙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더욱 농업 정책 활동에 매진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부터 항상 강조했던 '소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해 한농연 정책 활동사항들을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지역회장님과 대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성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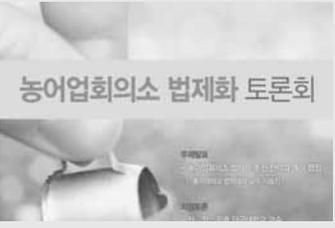
목 차

○ 2013년 한농연주최/주관 토론회 및 대응 성과	-----	1
○ 2013년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활동사항	-----	4
○ 2013년 한농연 발표 성명서	-----	28
○ 메 모 장	-----	85

한눈에 보는

2013 한농연 주최·주관 토론회 및 대응 성과

날짜	장소	토론회명
01.25	국회 도서관	<p>농업·농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p> <p>※대응성과 : 한국농어촌공사와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p> 
02.06	국회의원관	<p>박근혜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은?</p> <p>※대응성과 : 기존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변경하려 했으나 한농연의 요구를 받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식품 명칭 추가, 농식품 안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p> 
03.22	국회 귀빈식당	<p>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규제를 위한 간담회</p> <p>※대응성과 : 동부팜한농, 경기도 화성시화옹간척지에서 토마토 생산을 중단하기로 전격 선언</p> 
04.23	국회 귀빈식당	<p>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p> <p>※대응성과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서 한농연 법안 발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답변을 받음(사회적 공감대 형성)</p> 
05.23	국회 도서관	<p>화옹첨단유리온실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전문가 토론회</p> <p>※대응성과 : 대기업은 직접생산보다 육묘나 육정, R&D, 가공, 유통 등에 투자하여 기업과 농민 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방향을 제시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p> 

날 짜	장 소	토론회명
06.08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	<p>지역농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p> <p>※ 대응성과 : 故 박홍수 前 장관님에 대한 농정 철학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지역농정 활성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함</p> 
08.20	국회 소회의실	<p>민간 RPC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p> <p>※ 대응성과 : 정부, 민간, 학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졌으며, 한농연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의견을 같이 함</p> 
08.26	국회 제2소회의실	<p>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p> <p>※ 대응성과 : 세계개편안 발표 후 열린 첫 토론회로써 빠르게 농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농연이 제시한 의견과 토론회때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전달함</p> <p>※ 대응성과 : 의제매입세액 공제축소에 함께 연대한 것에 9월 12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김준봉 한농연중앙회장에게 감사패 전달</p> 
09.11	한국농업연수원	<p>이경해 열사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 토론회</p> <p>※ 대응성과 : 이경해 열사 정신 고취와 새로운 농권 운동과 올바른 농민운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 마련</p> 
11.26	국회의원회관	<p>농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p> <p>※ 대응성과 :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후 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이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함</p> 
12.10	한국 마사회	<p>UR체결 20년, 우리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관련 정책토론회</p> <p>※ 대응성과 : 개방 농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 촉구 계기의 장이 됨</p> 

2013년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활동사항



2013. 1.

2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은?” 토론회 개최

- 정부 조직 개편안 등 농정 현안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한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은?” 긴급 토론회를 오는 2월 6일(수)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 축소 개편 등 인수위의 농업 확대 경향 속에서 우리 농업인은 당선인이 농정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 악화 일로에 있는 농업·농촌 여건을 반영한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농업·농촌의 희생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부 및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무엇인지, 지혜와 의지를 갖고 논의해야 할 때다.

농식품부 축소 개편 등 인수위의 농업 확대 경향 속에서 우리 농업인은 당선인이 농정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낼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 조직 개편 등 농정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수위 정부개편 규탄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1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 긴급 기자회견>

2013년 1월 24일(목) 오전 10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개편안 중 농업과 식품업무를 분리 이관하는 결정에 대한 농민단체 대표자 20여명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준봉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은 "결국 농업과 식품을 분리시키겠다는 인수위의 구상대로라면 식품정책은 농업, 식품업의 특수성을 배제, 단순한 규정 집행으로 단순한 실적 올리기 위주의 무차별적 규제와 단속이 자행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 자명하고 반드시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 농업과 식품산업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 자명하고 반드시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태환 의원 면담”

1월30일 한농연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태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황영철 간사, 고희선 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정부조직법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김준봉 회장은 당선인이 ‘농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친필로 쓰기도 했는데 새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농업을 홀대한다며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직접 찾아왔다고 말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농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득을 증대해야 하는데 이 정부조직법으로는 생산밖에 못하며, 식품업무는 농업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떼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하였다.

김태환 위원장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좋은 의견을 도출했을 때 당선인이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관건이며, 이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다. 농민단체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행안위에도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 함께 얘기를 하겠다고 김준봉 회장과 약속을 하며 면담을 끝냈다.

“2013년 기사년 첫 단추 “농업·농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월 25일 농업·농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월 25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 방안을 주제로 “농업·농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빈번한 이상기후와 불안정한 세계 곡물시장, 시장개방 확대, 농촌인구의 고령화 확산,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국내 농촌의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농업·농촌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서 미래형 안정적인 농업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사회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3년 기사년에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논의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희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 2.

정부조직법 개편안 규탄을 위한 농업인 결의대회 개최

- 농정 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화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규탄, 농업인 결의대회 현장>

한농연은 2월 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규탄을 위한 농업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농연 일선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의 재개편을 촉구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이 총리실 산하의 식약처로 이관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은 반쪽짜리 부처인 농림축산부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고 김준봉 한농연 회장은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한농연 각 시군연합회 대표자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을 만나,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처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농식품부 이관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은?” 토론회 현장 >

한농연은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 긴급 토론회를 2월 6일 (수)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농정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급한 농정 과제는 무엇인지, 농업·농촌의 회생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부 및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 조직 개편 등 농정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농업과 농협 발전에 대한 감사로 농협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 농협 감사패 수여>

한농연 김준봉 회장은 2월 7일, 유통산업 발전법 및 농안법 개정을 통하여 국산 농축수산물 소매유통의 핵심인 농협 하나로 마트가 대형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의무휴무 및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제 15·16 대 중앙임원 이·취임식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5대, 16대 임원 이취임식>

1월 31일(목)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에서 개최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5대, 16대 임원 이취임식이 성료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농업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한농연 시도연합회 회장 및 일선 회원 등 300여명이 넘는 내빈들이 참여하였다.

내빈들은 농업, 농촌의 희생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써 온 15대 이임 임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 구성돼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될 16대 김준봉 회장 및 신임 임원을 축하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2013. 3. 29

동부팜한농 농업 생산 분야 사업 철수 발표

- 기자회견·집회·간담회 개최 및 불매운동 진행 등 한농연의 강력한 대응 이후 농업 생산 분야 사업 철수 발표 -



<대기업 농업 생산 분야 진출 규탄 기자회견 현장>
 있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단체들의 강력한 불매운동을 포함한 대응활동의 결과, 동부팜한농과 동부팜화옹은 3월 26일(화) 경기도 화성시의 화옹간척지 유리온실을 활용한 토마토 등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본 연합회로 보내왔다.

이는 농업, 농촌을 지키고 350만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한농연 농권운동의 소중한고도 자랑스러운 성과로써, 앞으로도 한농연은 대기업 재벌들의 농업 생산 진출을 포함한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 규제를 위한 간담회 개최”



<“농업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현장>

한농연은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분야 진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방안을 자리를 마련하고자 3월 22일(금) 1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단체, 학계, 대기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장이 되었다.

특히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마저 잠식했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농업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의 농업회사 법인 설립 규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부그룹 농업 생산 분야 사업 진출에 따른 한농연의 대응”

(주)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첨단 유리 온실 단지를 건립하고 전량 수출을 명분으로 토마토 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성명서 발표, ▲국회 대응활동, ▲토마토 농가 집회 참석(2.5) 등 강력히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동부에서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한농연은 동부의 농업 생산 분야 철수와 대기업들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 저지를 위해 ▲동부 제품 불매 운동, ▲현수막 걸기, ▲대기업 농업 생산 분야 진출 과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자회견 개최,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농연 각 시도연합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한농연은 동부의 농업 생산 및 대기업들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2013. 4.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일환으로 농민단체와 대형마트 상생 협약

-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상호간에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한농연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농축산물유통 구조 개선과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형마트와 농축산업이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유통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마트와 농축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 현장>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FTA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급증,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양 주체가 직시하고, 상호간에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한농연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춘진 국회 농림어업포럼 상임대표,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준봉 한농연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도매시장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시장도매인은 매수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현장>

또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만을 대변해 온 공영도매시장의 문제를 사회 이슈화 시켰으며 한농연이 제안한 과제(공영도매시장 지정권 환수, 시장도매인 매수 원칙 확립, 도매시장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3년도 한농연 시도연합회 정책부회장단 워크숍 개최”



한농연은 정책부회장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한농연의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5일 한농연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도 한농연 시도연합회 정책부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국장과 지역재단 유정규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농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흐름과 지역의 대응과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2013년 정책조정실 사업계획 목표 및 역할에 대해 다

<“2013년도 한농연 시도연합회 정책부회장단 워크숍”현장>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정책부회장단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농연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연합회 정책부회장단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3. 5.

동부팜한농 사태 이후, 화용 첨단 유리 온실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화용첨단유리온실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전문가 토론회>

한농연은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윤명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김준봉 한농연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농업 관계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부팜한농 사태 이후, 화용 첨단 유리 온실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화용 유리온실을 농민주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 ▲ 농협이 화용 유리온실을 인수하는 방안 ▲ 기존 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안 등 화용 유리온실을 활용하기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한농연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의 진출은 어렵다.”라는 농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대신 대기업은 직접생산 보다는 육묘나 육종, R&D나 가공, 유통 등에 투자하여 기업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13. 6.

'故 박홍수 前농림부장관 5주기 추모기념' - 지역농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가 주최하고 한농연경상도연합회(회장 김치구), 한농연남해군연합회(회장 김인선)가 주관한 '故 박홍수 前농림부장관 5주기 추모 기념' 지역 농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월 8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 토론회 현장>
이루어 졌다.

이날 종합 토론은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농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농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농어민들의 조직화와 단체 활동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농연에서 건의한 축산농 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정책 실시”

정부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해 17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축종별 보증한도가 축종에 관계 없이 한 농가당 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자에 대한 심사방법 또한 대폭 완화되었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시행은 한농연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농신보 보증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방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2만 9000여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금액으로는 5,000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보 여력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축산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한농연은 6월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및 중앙 임직원, 시도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7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 기존의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정책으로 많은 갈등이 양산되었는데 적정 가격에 대한 합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수급조절위원회 등은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품목별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 단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은 영세 출하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한농연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가 늘어 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견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3. 7.

한중FTA중단! 한국농수축산인결의대회 개최 - 협상대표단에 의견전달, 언론보도 공론화 등의 성과 올려...



<한-중 FTA중단! 집회현장>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 까지 2박 3일간 한-중 FTA 6차 협상 저지를 위한 집회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도 우리 한농연 회원을 포함한 5,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하였다.

집회 첫 날에는 부산 벅스코(BEXCO)에서 해운대역 협상장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한-중 FTA를 반대하는 400만 농어민들의 소리를 부산지역 시민들과 정부협상 대표단에게 강력히 전달하였다. 이어서 집회 둘째 날에는 경남, 부산, 울산지역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해운대광장에서 적극적으로 한-중 FTA를 반대

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전하였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중 FTA이 체결될 경우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에 폭넓게 개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은 물론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도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한농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농연, “정부의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 폐지·축소”에 성명서 발표 및 건의

지난달 26일 조세연구원이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실천의 일환으로 농림분야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정비방안을 내놓아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조치인 ▲농업용 면세유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생산비폭등, 농업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더욱 압박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한농연은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곧바로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도 지난 5일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농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농연은 성명서발표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비과세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일몰연장, 비과세 예탁금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측은 세제감면 일몰 연장 관행을 없애고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세제지원, 정책목표를 이미 달성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민 등친 “비료업체를 상대로한 다행관련소송” 진행사항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비료담합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1,2차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나,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지 않아 다음 일정은 조정 중에 있다.

지난 5월 7일 원고측 대리인은 각 원고별 비료 구매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원고별 ‘비료공급일자, 비료공급상품,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가액, 보조금’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제 3회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3일 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지 않았고, 회신내용이 방대하여 언제 도착할지 예상할 수 없어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다음기일을 조정중에 있다. 따라서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또한 단위구매액 당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비료회사들 간의 행정소송은 원고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케이지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 제주비료 중에서 조비 사건만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없다. 하지만 LPG담합관련의 소송도 3년 이상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료담합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3. 8.

박근혜정부의 세계개편안, 현장반발 고조되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계개편안 관련 정책토론회 현장>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이 주최하고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축산연합회가 주관하는 “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안 관련 농업계 입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비과세 감면 정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계개편안이 농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농업계의 입장 정립을 명확히 하기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날 토론회에는 한농연 회원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이번 세계개편안이 농업현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외식업계, 농업분야, 세무·회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이번 세계개편안은 가뜰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세계개편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이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민간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윤명희 국회의원, (사)한국 RPC협회, (재)GS&J 인스티튜트가 주최하고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민간 RPC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민간RPC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현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과 전북대학교 조가욱 교수가 ‘민간 RPC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고, 농업전문가, 관계부처, 현장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비축미매입방식, RPC의 경영안정성, 정부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며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RPC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쌀 산업이 처한 위기를 생산농가를 비롯한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나타내었다.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10년 더 연장...

내년 6월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시한을 기획재정부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해온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농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 후속대책으로써 신설된 것으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FTA의 비준으로 10년 더 연장되어 내년 6월이 종료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2024년 까지 농특세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발표된 세계개편안은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 정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큰 시름에 빠져있던 농업계에 이번 농특세 10년 연장은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13. 9.

이경해열사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토론회 개최

“이경해열사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토론회” 개최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토론회’가 지난 11일 전북 장수군 농업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은 사전행사로 종합운동장에서 농업연수원까지 ‘도농상생 견기대회’도 열렸으며, 추모식 회장 주변에는 이경해 열사의 유품과 열사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이어서 열린 기념토론회에서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이경해 열사, 그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토론자들과 함께 한국농업의

〈이경해열사 10주기 기념 토론회 개최 현장〉
방향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이경해 열사가 바란 농업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모두 입을 모았다. 또한 농정당국의 정체성과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농업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의 농업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농업정책도 비판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공청회(가칭, 농업인상해보험)’에 한농연 참여, 건의사항 전달...

지난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aT센터에서 열렸다. 정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보험사 판매방식 유지 ▲전담기관의 설립 ▲가입대상:농업인, 영농에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농작업 근로자 ▲임의가입방식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 ▲국고지원 수준(보험료 50%)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 관계자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은 산재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험으로 추진해야 되어야하며, 보험료에 대해서도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성격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보험운용을 위해서는 농업정책보험만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일용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정부지원을 주고 보험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2013. 10.

한농연, 2013 국회 우수국감의원 선정 계획 및 11대 요구사항 발표!!

10월 14일부터 시작된 2013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농연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 관련 우수 국회의원 선정 계획 및 주요 11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국정감사 관련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한농연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계에서는 유일한 상이다. 이에 한농연은 현장 농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요 11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2013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1대 요구사항 -

- | | |
|------------------------------------|-------------------------------------|
| 1.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6. 농협경제사업화 활성화 검증 및 제도개선 방안 |
| 2. 농업인이 공감하는 세제개편안 마련 | 7. 민관 협치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 3. 사회적합의를 전제로한 쌀 재협상(쌀 관세화) 추진 | 8.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농어촌부흥세 신설 |
| 4.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및 체계적인 후계인력 육성정책 | 9. 현실에 맞는 농촌 복지 체계 개선 |
| 5. 직불제 확충 등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 10.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
| | 11.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하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 |

이번에 발표된 요구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한농연 관계자들은 우수국감의원 선정을 위해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 참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농해수위의 이번 국정감사는 11월 1일 까지이며, 한농연은 국감종료 후 국감 모니터링 한 자료를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하여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비료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 필요”

10월 3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한국 비료산업의 발전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한농연 관계자가 참석하여 비료산업과 관련된 농업인들의 입장을 전하고, 여러 의견을 건의하였다. 비료는 농업인들에게 있어 필수 농자재이기 때문에 비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이 근본적으로 회생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비료업체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비료 담합문제는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합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위법에 대해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료가격의 상승·하락으로 갈등을 겪는 구조를 상생과 화합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협의 비료공급자문회의, 비료공업협회의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료의 적정가격에 대해 업체와 농업인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3. 11.

“2013 한농연 선정 우수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 홍문표 의원, 이운룡 의원, 김영록 의원, 황주홍 의원 수상



<2013년도 한농연 선정 우수국감의원 시상식 모습>

한농연은 지난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의 시상식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다. 국감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농연 모니터단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인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우수국감의원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이운룡(비례대표), 김영록(전남 해남·진도·완도),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의원이 모두 참석하여, “농민을 대표하는 한농연에서 이런 상을 수상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업농촌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농연 김준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수 국감의원 시상을 통해 어려운 농업 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한 우수국감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상받지 못한 농식품위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폐농약용기 회수촉진보증금제 - 현행인 단순 보증금 회수에서 인센티브추가”

지난 11월 20일 환경공단이 ‘폐농약용기 회수촉진보증금제 최종설명회’에서 폐농약용기류의 회수촉진보증금제를 현행 보증금만 회수하던 것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기존 폐농약용기 회수촉진보증금제는 농약값에 빈병 보증금을 추가해 판매한 뒤 농가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만 회수받는 것으로, 맥주·소주병 등을 슈퍼마켓 등에 돌려주고 보증금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한농연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이번 ‘폐농약용기 회수촉진보증금제’에 이 건의사항이 관철되었다.

2016년에 도입될 예정인 회수촉진보증금제를 적용하면, 폐농약에 포함된 보증금 50원에 더하여 폐농약 수거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5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농가들은 총 1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폐농약을 회수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부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환하는 개별 농민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회수관리 인력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라고 환경공단은 밝혔다.

“한중FTA 협상 규탄 대회 열려...”



<한중FTA중단!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 모습>

한중FTA 8차 협상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한중FTA를 반대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비상대책위원회 7,0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평생학습관 앞에서 '한·중 FTA 중단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 낭독을 비롯해 인천 평생학습관에서 해돋이공원까지 2.3km 구간을 행진하며 FTA 8차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3. 12. 20

“UR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 한농연 창립 26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



<26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현장>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하여 “UR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정책토론회”를 12월 10일 (화)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1주제발표를 맡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관련 핵심 공약들은 후퇴하였고, FTA와 TPP협상으로 농업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박근혜 정부

의 농정을 평가했다. 이어서 제2주제발표를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농어업회의소법의 법제화와 함께 품목별 마케팅보드 구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결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농연은 한국 농업·농촌의 회생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운 화두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한농연 창립 2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 행사 모습>

또한 토론회가 끝난 후, 이어진 한농연 창립 2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 행사에서는 흥천다문화어울림합창단의 축하공연, 감사패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3년

한농연 발표 성명서

- 2013년도 한농연중양연합회 발표 성명서 목록 -

일 시	내 용
01.08	[성명] 대형마트 추가 규제법 여·야 합의에 대해 400만 농수축산인들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01.10	[성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불량 농산물 수입·판매사건에 350만 농업인과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01.16	[성명]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되어야 한다
01.21	[성명]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대책위원회' 설립·운영 공약을 이행하라
01.23	[성명] 추세 역행, 시대 역행, 인수위의 차기 농정 구상은 오로지 역행 뿐인가?
01.28	[성명]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02.07	[성명] 농축산업 죽이기 결정판, 정부조직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02.18	[성명]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03.15	[성명] 서울시의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 제한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03.19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기간 연장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03.29	[성명] 농업을 평가절하하고 사실을 왜곡한 논조로 일관한 매일경제는 350만 농민 앞에 사과하라!
04.04	[성명]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실패한 농업선진화위원회 전철을 밟을 것인가?
04.15	[성명] 농협법 개정 논의, 좀더 신중한 인식과 접근이 요구된다!
04.17	[성명]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맞춤형 비료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한다.
05.21	[성명] 다시 드러나 답함! 해당 업체의 징계와 관리체계 확립 필요
05.28	[성명]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06.03	[성명]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심히 우려된다
06.04	[성명]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06.26	[성명]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
07.10	[성명] 2014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07.18	[성명]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라.
07.31	[성명] 농림수산물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한농연의 입장
08.08	[성명]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에게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08.30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09.06	[성명] 농업 붕괴의 단초, 한중 FTA 1단계 협상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09.13	[성명] 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제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09.27	[성명]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가시켜라.
10.01	[성명]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10.08	[성명] 경제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가입을 반대한다.
10.31	[성명]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11.06	[성명] 소비자·농업인을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농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11.06	[성명]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증액하라.
11.11	[성명] 정부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을 강력히 촉구한다.
11.14	[성명] 어려운 서민·농업인들 농락하는 농축협의 대출금리 임의 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11.22	[성명] 농업 경영비를 상승시키는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11.25	[성명]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강력히 규탄한다.
11.25	[성명]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폄하하는 사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11.26	[성명]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11.26	[성명] 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1.29	[성명]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12.03	[성명]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12.05	[성명]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2.11	[성명] 우원식위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12.18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12.23	[성명]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형마트 추가 규제법 여·야 합의에 대해 400만 농수축산인들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 농수축산물이 가장 잘 판매되는 휴일을 휴무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막대 할 수밖에 없다. -

1. 대형마트 추가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월 1~2일 휴무를 하되 요일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매월 이틀 공휴일(일요일)로 휴무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나 법에서 공휴일 휴무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휴일 휴무를 선택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형마트들의 농수축산물 매출이 가장 높은 공휴일에 휴무를 할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은 막대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공휴일에 장보기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우리 농수축산물 매출 급감은 볼 보듯이 뻔하다고 본다.
3.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들이 3조 2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직격탄은 농수축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보며, 또한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 농수축산물 개방과 그로 인한 가격 폭락은 현재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4. 더구나 대형마트를 추가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오히려 휴무를 피해 다른 요일을 선택하거나 구매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편함만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 및 유통 전문가들도 대형마트 추가 규제 쪽 보다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하여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도모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5. 이에, 대형마트 휴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농수축산물 매출을 급감시킬 것이며, 우리 농어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장보기 불편함만 증가시키기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여·야가 합의한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농어민을 대표하여 우리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이 우리 농수축산인들의 우려섞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로인하여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쟁기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불량 농산물 수입·판매사건에 350만 농업인과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국산 농산물 가격 억제 위주의 정부 물가 정책의 즉각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1.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판매·수입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11년 곰팡이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중국산 건고추 6,600톤과 양파 1,950톤 등 불량 농산물을 대량 수입·유통시킨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국민 혈세로 조성한 농안기금으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불량을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면서 저질 고추 수입을 강행하고, ‘품질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불량 농산물을 상인들에게 헐값에 떠넘겼다는 사실에, 350만 농업인과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국산 농산물 가격 억제 위주의 정부 물가 대책의 문제점을 한농연은 2011년 8월 24일 긴급 세미나에서 집중 제기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물가국장 또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국산 농산물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가 당국은 농산물 수입 확대라는 손쉬운 미봉책으로만 일관했으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이 5천만 국민의 식품 안전권과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비리·부실로 점철된 이번 사태를 초래했음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3. 그럼에도 정부는 계약재배 배추 6백톤을 시세보다 40% 싼 값에 방출하고, 대과·시금치·당근 등의 국내외 생산·수급 동향을 점검하겠다면서 국산 농산물값 억누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파와 폭설로 공급량이 급감한 주요 신선 채소류의 가락시장 경락 가격이 1월 첫째주 들어 최대 40%까지 폭락하는 등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 물가 정책에 대한 3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4.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 유통공사 직원들은 자사 퇴직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가로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시세보다 35% 높은 값에 중국산 불량 건고추를 들여왔으며, 식약청 역시 문제의 건고추를 찾아내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유통공사의 관련 직원을 문책하고 식약청에 농산물 관능검사 판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비껴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정부 담당 기관과 공기업이 연루된 총체적인 부실·비리로 귀결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나 명료하다. 혈세로 조성된 농안기금으로 대량의 불량 농산물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들여오는 일이 가능케 한 잘못된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부터 정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특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일부 관련자의 문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를 포함한 임직원이 3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국산 농산물의 생산 기반 유지와 자급률 향상이라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매진해야 함을 한농연은 강조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김광천 대외협력실 실장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재논의되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조직을 재개편하고 당선인 공약사항인 농특위를 부활시켜
농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축산업의 기능이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반토막이 났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어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자면 정부 내 비효율은 더욱 가중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2. 인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격상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시대적 과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규제, 감독의 틀로 움매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선진국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면서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관리 측면에 구멍이 생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변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3. 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고 볼 때, 50조원에 육박하는 식품산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몇몇 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편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기능인 '식품산업'을 개편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의도된 것인지, 혹은 부처의 명칭과 역할자체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지금과 같이 풀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당선인 공약사항인 '농업특별대책위원회'를 부활시켜 농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11월 한농연 주최로 개최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당선인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을 350만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5. 부처 이원화에 따른 정책 대립이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이제라도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 조직 재개편과 농특위 부활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350만 농민들은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한민수 실장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대책위원회' 설립·운영 공약을 이행하라

- '농식품·농어촌대책위원회' 설립과 '농림축산식품부'로의 개편을 위하여, 인수위 및 여야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을 2실 9수석 체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농정 부처의 '농림축산부'로의 축소·개편 방침과 함께 새누리당 대선 농정공약의 핵심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마저 무산됨에 따라, 12만 한농연 회원과 400만 농수축산인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정공약에 근본적인 회의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오랜 세월 농업통상 및 농업정책을 둘러싼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농업인과 정부, 정치권 사이의 농정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농정체제로의 수립이 절실하며,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협치(거버넌스) 체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 계획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농어업·농어촌의 근본적 회생을 통한 국민통합시대를 갈망하는 400만 농수축산인의 염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5. 한농연 및 농업계 대표들이 지난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와의 간담회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을 즉각 복원·시행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직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기존처럼 농정 부처가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 또한, 박근혜 당선인의 농정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김광천 실장

추세 역행, 시대 역행, 인수위의 차기 농정 구상은 오로지 역행 뿐인가?

- 농업계는 안중에도 없는 인수위의 정부부처개편 후속조치를 규탄한다 -

1.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는 발표 이후 학계와 현장 농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으나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대통령직 인수위는 22일 오후 4시 정부부처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농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2. 22일 발표된 후속 조치는 종전 단순히 식품 업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이관 발표이후 농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이관 방침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는 안전과 관리라는 무지한 발상으로 농식품부 산하의 검역기관들을 식약처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식약처 이관론자들조차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이 어떻게 식약처 식품업무 이관 논리로 설명되는지 의문이다. 식품의 생산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98년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가 농식품부로 재이관 된 후 축산물 위생수준이 큰폭으로 상승했던 선례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농식품의 식품, 생산관리 일원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4. 그럼에도 인수위의 구상처럼 오직 소비자를 핑계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수위원들과 이를 승인하는 차기 지도부의 5년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농식품 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우리 350만 농민은 이토록 농업계를 무시하고 유린한 인수위원들의 사과와 더불어 제대로 된 정부 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농업을 홀대한다면,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 (주)동부팜화용으로 인해 국내 토마토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

1.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의 진출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와 불안이 고조 되고 있다. 실제,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인 (주)동부팜화용은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첨단 우리 온실 단지를 건립하고 전량 수출을 명분으로 토마토 생산을 시작하였다.
2. 물론, 토마토 생산 농산물 전량을 수출한다고 하나 세계시장 개척은 한계가 있어 기존 농가들의 수출시장과 겹치고, 수출이 어려울 경우 내수시장 진입으로 국내시장을 교란 할 우려가 있다. 실제 동부그룹은 팜슨을 인수 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내에 토마토를 유통시키지 않았는가?
3. 일반 농가와 대기업이 수출·내수 시장을 놓고 경쟁 할 경우 동부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비료, 농약 등 값싼 농자재를 공급 받게 되어 일반 농가는 경쟁을 할 수 가 없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 자행하여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일감 몰아주기와 비슷한 형태로 요즘 대세인 경제민주화에도 역행되는 것이다.
4. 특히, 350만 현장 농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단지에 대규모 FTA 지원 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이다. FTA 지원 기금은 FTA 농업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혈세인데 재벌 계열사에 지원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이에,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농업 생산 부분 진출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중단함은 물론 약속을 위반하고 농산물 내수 시장을 위협할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지원 기금을 즉각 회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 진출을 차단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에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축산업 죽이기 결정판, 정부조직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마련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오는 14일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350만 농업인은 식품산업의 진흥·육성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국민의 먹거리,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조직 개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민족의 대명절을 앞둔 바쁜 시기에 이곳 국회 앞에 모였다.
2.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까지 총리실 산하의 식약처로 이관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겨놓은 채 반쪽짜리 부처인 농림축산부로 격하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에서 현장 농민들과 직접 연관된 관련 법이 공중분해 되어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350만 농민들과 직접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실제로는 농업 말살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3.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다. 농업 선진국들이 일찍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농정 부처로 일원화하면서, 자국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도농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식품안전성 문제를 단순히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농식품 분야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일 뿐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모든 과정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우리 350만 농업인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권이 직접 나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3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약속하라!

하나, 농정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농축산물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졸속적인 농정 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6. 만약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3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정권초기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의 대회를 시작으로 2차, 3차 투쟁을 전개하고 전국 각지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3년 2월 6일

농축산업 말살시도! 정부조직개편 규탄!
농민 긴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 현장 농업인과 소통속에서 농업·농촌·식품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 장관이 되길 바란다. -

1.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부 장관에 이동필 現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하 농경연)이 내정되었다. 이동필 신임 내정자는 30여 년간 국책연구기관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고 농업인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한농연은 이번 신임 장관 내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특히, 이 내정자는 농경연에 재직하면서 농업·농촌·식품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농식품 정책 방향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 내정자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농심에 대한 파악도 빠르다.
3.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지만 인수위원회 등 정권 인수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실망은 크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식품 안전 일원화 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현장 농업인들의 큰 불신을 낳았다.
4. 또한,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추진 의사가 없고 쌀 직불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실천 계획도 불분명해 보인다. 정권 인수 시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농정을 선부르게 제단 할 순 없지만 이 내정자가 현장 농업인들의 불신을 신뢰로 구축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길 바란다.
5. 이런 상황속에서 이 내정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장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가 밝기 때문에 현장 농업인들의 기대가 크다. 이에, 이내정자가 개방화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운 농정 여건 속에서 현장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농업·농촌 희생 대책과 식품 발전에 위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3년 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서울시의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 제한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 서울시는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도농상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1.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농업을 볼모로 잡고 나서 현장 농업인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는 8일 무·배추 등 채소류 17개 종을 포함해 51개 품목을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제한 대상으로 발표했다. 상대적인 약자인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던 취지이지만 농업인의 가장 큰 판로처인 서울 소재의 대형마트에 농산물 판매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장 농업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생산비 폭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오렌지·체리 등의 수입이 급증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판매를 제한한 품목 대다수는 국내 농수축산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3. 그리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한달에 2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게 되어 있어 2일 휴무 기간 동안에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지 못해 신선도 하락 및 감모 발생으로 현장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요 농수축산물까지 판매 제한을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4.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농수축산물 비중이 55%를 상회하면 농수축산물의 판매의 문제가 있어 휴무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는데 대형마트의 농수축산물 판매 제한은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초법적 조치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농수축산물 유통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는 유통비용과 탐색비용을 줄여 주어 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한다.
5. 이에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당장 취소하고 도농 상생의 자세로 우리 농산물 소비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서울시의 이번 초법적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도농이 상생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근혜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기간 연장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 특별세는 기간 연장되어야 한다. -

1. 정부는 현재 다른 세금의 세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附加稅)'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는 등 세목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고 농어업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현장 농어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약을 통해 400만 농어민과 약속하였다. 그런데 취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3. 또한, 농어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가 폐지 될 경우 농어업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업 총생산액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회계에서 농특세 대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4. 실제, 2013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6.3%인데 반해 농림수산물식품 예산 증가율은 0.02%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아울러, 농특세로 걷는 재원만큼 일반예산을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굳이 농특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농특세를 영구화하자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동 법안을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발의한 상황이다.
5. 이에 농어촌특별세는 FTA 체결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예산 확보에 가장 필요한 세목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처럼 연장되어야 한다.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신뢰를 저버리고 농어촌특별세를 폐지 할 경우 우리 400만 농어민은 향후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해 불신 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을 평가절하하고 사실을 왜곡한 논조로 일관한 매일경제는 350만 농민 앞에 사과하라!

1. 매일경제는 3월 28일 사설 『아그리젠토 코리아' 꿈 깨트린 농민단체들』에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저지하려는 농업인단체의 정당한 대응 활동에 '과격 투쟁' '집단 생떼' '저부가가치 사양산업' '농업 지원금 나눠먹기에 혈안'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매도하였다. 이는 공정 보도라는 언론의 공적 책무마저 저버리고 농업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폭거이다.
2. 매일경제는 화옹간척지 유리온실이 '아그리젠토 코리아'의 일환이라면서, 국내 농업을 '미래형 6차 수출산업'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반면 정부가 17년 동안 116조원을 농업에 투입했음에도 농가부채는 되레 3배 늘었고 농산물 무역적자는 21조원에 달한다면서, 오늘의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의 책임은 농업 지원금 나눠먹기에만 급급한 농업인단체만의 잘못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3. 이러한 매일경제의 궤변은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일 뿐이다. 첫째, 매경은 '한국농업이 30년째 GDP 대비 4%에 못 미치는 저부가가치 사양산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 주요 농업선진국도 농업은 GDP의 2%이고, 취업자는 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EU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지만, EU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70%에 달하다가 최근 40%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수출경쟁력은 막대한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에 기초한 경쟁력이었던 것이다. 매일경제는 '아그리젠토 코리아'를 미국과 EU농민에게 부르짖어야 할 형편이다.
4. 둘째, '농민단체들이 농업지원금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농업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농업인 개인 혹은 영농법인이다.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들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거하여 이들의 신용상태와 담보여력, 사업가능성을 엄정히 평가한 뒤 점수가 높은 개인 혹은 영농법인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엄연한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적 내용을 사설로 공표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인 역할과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5. 셋째, '17년 동안 116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그 내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16조원은 정부가 흔히 쓰는 수사이지만, 대부분 농민에게 직접 간 것이 아니다.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반정비 등 SOC에 투입되었고,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농촌 주민의 의료, 보건,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인프라에 쓰였으며, 농업 생산 부

분에서도 용자로 지원해 실제 지원액은 이차보전액 규모에 불과하다. 이러한 용자 지원이 시설에 투입되어 생산자산이 늘어난 대신에 농가부채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6. 넷째, '농업 부문 무역적자는 연간 21조원에 달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22%에 불과하고, 식량수입국으로 된 원인은 무엇인가? 8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개방, 1995년 WTO출범과 2000년대 자유무역협정의 진전 때문이다. 막대한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유통 장악을 통한 경쟁력을 지닌 농산물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식량은 수입해도 된다는 농업개방론자, 매경과 같은 경제전문지 등이 원했던 결과 아닌가?
7. 마지막으로 동부팜화옹의 경우에도,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FTA로 피해를 보게 된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기금이 대기업에게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소위 대기업 '낙수효과'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한국경제에서 경제이념으로 위력을 떨쳤던 '낙수효과'가 이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8. 한농연은 매일경제가 '아그리젠토 코리아'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예산과 제도로 어떻게 뒷받침해 왔는지 조사해 볼 것을 요구하며, 그러고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매일경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론직필의 경제전문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중히 권고한다.

2013년 3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실패한 농업선진화위원회 전철을 밟을 것인가?

-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

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장기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한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이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과는 배치되어 자칫 실패한 농업선진화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동필 장관의 취임 일성이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인 만큼 위원회 구성·운영안부터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2.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운영안을 마련하다 보니 위원회 및 분과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위원 구성을 보면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보다는 비농업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국민공감도 중요하지만 농정의 수혜자이자 고객인 현장 농업인들의 공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농업계 인사는 농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3. 이에,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홍보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 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정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도출 결론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한다.
4.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공감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실패한 농업 선진화위원회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참여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에 한농연 등 현장 농업인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정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도록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농업농촌의 푸른 꿈!!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박상희 정책실장

농협법 개정 논의, 좀더 신중한 인식과 접근이 요구된다!

- 인사추천위원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변경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 달성 가능성이 의문 -

1.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3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국회 농해수위는 4월 16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동 발의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고, 인사추천위원장을 농협중앙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2009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어렵사리 개정된 현행 농협법은, 민주적 투명 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로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실익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대응하여 신용 및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권화된 책임경영체제 및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협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농협법 개정 논의는 좀더 신중하게 인식·접근되어야만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사추천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농협중앙회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인사 추천에 관련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등과 관련한 농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껏 분분한 현 상황에서, 선부른 농협법 개정이 자칫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축협의 조직 안정화를 통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의 농협법 개정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한농연은 지적하는 바이다.
5. 240만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자주적인 협동사업체로서 한국 농협을 정립시키기 위한 농업계 내외부의 지혜로운 현실 인식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쪼록 국회 농해수위 및 여야 정치권은 물론 농업계 내외부의 전문가 모두가 지속가능한 한국 농협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여, 현 상황과 미래 농업·농촌·농업인의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신중하고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맞춤형 비료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한다.

- 맞춤형 비료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현장 농가들의 고통과 원성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것이다. -

1.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이 2012년도를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현장 농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은 2010년부터 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비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 된 제도인데, 2013년도에는 보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맞춤형 비료값이 24%나 폭등 할 가격이 예정이다.
2. 사실, 비료는 필수 영농자재로써 농업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높고 소득 증가분 보다 비료값 상승치가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1년 농가소득은 1.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은 1.9배나 상승하였다. 특히, 맞춤형 비료 도입은 과거 대비 화학비료 사용량을 34% 줄이고 작물 요구에 적합한 양분 공급으로 농산물 품질이 개선되었다
3. 맞춤형비료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은 물론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취임 일성인데, 맞춤형 비료 보조 예산은 현장 농가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민생 예산이다.
4. 이에, 맞춤형 비료 공급의 연착륙 유도와 FTA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포당 지원 단가도 8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여 최소 연간 300억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맞춤형 비료 보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맞춤형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 부담은 매우 가중 될 수밖에 없어, 현장 농가들의 고통과 원성은 정부와 국회에 향한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다시 드러나 담합! 해당 업체의 징계와 관리체계 확립 필요

-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

1.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기계 가격 담합을 한 5개 농기계 제조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공급업체들이 지난 9년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이번 행태에 현장농업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외적요인과 급격한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정체 내지 하락으로 농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이 2012년 기준 4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공정위로부터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여됐다는 것은 농가경제 전반에 공공연한 담합 내지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담합 행위 적발 업체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인상을 결정과 동종 업종에 비해 낮은 마진을 이유로 경영난과 과징금 부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농가의 여건 속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4. 정부는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농기계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다시는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자재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담합에 따른 업체들의 이득은 곧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체의 담합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라는 사후 징벌적 체계를 넘어 담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기자재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기자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원가 분석시스템 재점검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생산비 인하를 유도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하는 대책을 골자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과거 근시안적인 농산물 유통 대책과는 달리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350만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우선,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중심의 물가·유통 정책에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가격안정대 설정 및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 정책에 때문에 현장 농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에 따라 유통의 공정성과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3. 또한,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과 대금정산 조직 설립 등은 공영도매시장의 효율화를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자 단체의 유통계열화 비중을 높이고 유통 경로를 다변화 할 경우 생산자들의 수취 제고 향상과 소비자 구입 가격 안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다만,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 하는 정책이 누락된 것과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품목별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 단위를 설정하겠다는 것은 영세 출하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유통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관리 할 체계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대체적으로 올바르게 수립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일부 미흡·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부 당국이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대책이 구호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박상희 실장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심히 우려된다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투융자 및 소득·경영안정 대책의 확충·강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정부는 5월 31일 ‘공약가계부(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를 발표하였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 및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제도개선 등 세출절감을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 특히 농림 분야와 관련하여, △농림 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 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 분담 재설계 △성과 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 사업 일몰제 적용을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총 5조 2천억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3. 이같은 예산 당국의 방침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값 상승,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 공격적·체계적인 농업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불필요한 건설·토목분야 SOC 투자를 줄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증세를 통해 농업 등 취약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4. 더욱이 이번 ‘공약가계부’가 목표로 하는 세입 확충 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한 세입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에 대한 350만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 ‘공약가계부’가 목표로 하는 각종 농림 투융자 및 소득·경영안정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5.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이번 ‘공약가계부’의 정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문제점 지적 및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꼼꼼한 진단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관철하는 데 매진함은 물론,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회생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농업 투융자 및 소득·경영안정 제도의 확충·강화에도 적극 매진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도매시장법인지정권 환수, 시장도매인 매수 원칙 확립 등은 350만 농업인이 가장 개정을 원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

1. 김춘진 국회의원은 현장 농업인들의 입법 건의를 받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개설자(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 ▲시장도매인의 매수 원칙 확립(농림축산식품부령의 범위에서만 위탁 허용), ▲도매시장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2. 이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장으로서,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공공성을 정책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소비지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의 인·허가는 소비자 대변 기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예컨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발전한 일본도 이와 같은 체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4. 또한, 현행 농안법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으로서 매수와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위탁과 매수 거래의 불확실·불투명성이 존재하고 대부분 산지 농업인이 영세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과의 사전 가격 교섭이 일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장도매인의 거래 원칙을 매수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5. 아울러, 대량 유통망을 구축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도매시장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350만 농업인들과 20개 농민단체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화훼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품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오리협회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에도 강건너 불구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도 각성하라!! -

1. 조세연구원은 26일(수)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실천으로 일환으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농림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예탁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등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제도화 될 경우 취약 계층인 우리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실제, 현장 농업인들은 가격 하락 일변도의 물가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되고 있는데 생산비는 폭등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다음주에 개최되는 한·중 FTA 협상으로 농촌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폐지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3. 특히, 농림어업용 면세유가 폐지 될 경우 생산비 폭등과 농업 분야 투자 기피 등으로 농업경쟁력은 하락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한·미 FTA 여·야 합의로 10년 동안 면세유 일몰 기간이 연장 되었는데 폐지 될 경우 정권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과세 예탁금 폐지는 농업인들과 서민들의 소득 저하는 물론 농·수·축협 및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경쟁력 향상에도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 농업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강건너 불구하고 있는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조세연구원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에게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5. 이에, 이번 조세연구원의 조세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 및 박근혜 공약 가계부 백지화를 위해 우리 농업계는 다음주에 개최되는 한·중 FTA 추진 규탄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대 정부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3년 6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4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림수산물분야의 예산 증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

1. 2014년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요구액이 올해 보다 최소 3.3% 감액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농업분야 비과세를 감면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또다시 농업분야 예산까지 줄이려 하고 있어 농촌현장의 어려움이 점차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농촌현장은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물가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생산비는 폭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협상·체결로 농촌현장은 붕괴 직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 감면과 더불어 농업분야 예산까지 감액한다면 농촌현장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예산 확충을 통한 농업에 대한 집중적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에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과 더불어 2014년 농업분야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이를 위축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이처럼 농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연일 농업분야의 조세감면과 예산 축소로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예정대로 2014년 농업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로 감액한다면 우리 350만 농업인은 예산 편성을 주도한 정부 당국자에 그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며, 향후 한·중 FTA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5. 이에, 350만 농업인은 정부의 농업분야 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14년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증가율만큼 6.6% 증액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최범진 사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라.

- 정부차원에서 피해현황의 신속한 조사와 현실적인 재해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1. 지난 11일부터 잇새간 내린 폭우로 강원도 내 9개 시군에서 155ha에 이르는 농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으며, 가축(닭) 8,0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양봉 50여 군이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잇따른 FTA 협상·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과세 감면제도 및 농업분야 예산축소 등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는 가뜰이나 어려운 농가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피해지역의 복구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 그러나 농업재해대책은 구호성 자금의 대책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용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이러한 이유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재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확기 이전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시설물 보상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직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 및 보상 단가를 인상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한농연의 입장

1.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의원 54인은 지난 29일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농림수산분야에서 5년간 5조 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적극 반대해온 우리 한농연은 이번 결의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농업생산비 상승,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연이은 FTA의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업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350만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임에 분명하다.
3. 실제,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업분야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약가계부를 이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350만 농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에 틀림없다.
4. 이에, 우리 한농연은 이번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의안이 즉각 수용될 것과 함께 전체 예산 증가율인 6.6%만큼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한농연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약가계부 철회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증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에게 세계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세계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350만 농업인들은 세계 개편안 철회 및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다. -

1.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을 주요 내용하는 세계개편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농업 분야 비과세 정비 계획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세계 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3. 우선, 농업소득세의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농업소득세를 부과 할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위축 될 것이다. 반면에 징수 행정 비용과 추가 납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비효율성만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 할 경우 장기 영농 의욕을 저하 시킬 뿐만아니라 동 제도의 취지상 자경 당시 농업 외 소득 수준으로 동 제도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축소는 제조품목 또는 업종에 따라 원료구입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 공제 한도 설정이 곤란하고 우리 농업계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요식업체의 부담도 가중되어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및 비과세 감면 축소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7월 29일 54명의 국회의원이 동 내용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5. 이에 우리 농업계는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세계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계 개편안 철회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와 요식업체 등과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농업농촌의 푸른 꿈!!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회원지원실 한민수 실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선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1. 공석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미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8월 22일 5명의 최종 후보자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으며, 농식품부는 신원 조회 및 인사 검증절차를 거쳐 9월초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는 신임 사장을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 분야의 생산 기반 확충·정비 및 농어촌 정주공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이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여,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소득 증대를 꾀함으로써 국가 식량주권을 지켜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를 책임지게 될 신임 사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3. 그러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은 △공사의 기본 업무인 기반시설과 수리시설의 관리·정비 및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재해 예방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제인 △시장개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주거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형 농업생산 구조를 전환시켜 나가는 일에도 매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도전과 과제를 책임져야 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임 사장은, 급변하는 농어업 분야의 여건은 물론 공사의 현안을 깊고 넓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2013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김광천 대외협력실장

농업 붕괴의 단초. 한중FTA 1단계 협상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초민감품목 10%를 농업분야에 전액 할당해야 한다 -

1. 한중FTA 1단계 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단계 협상 모델 리티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작년 5월 시작된 1차 협상이 1년 4개월만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는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되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로 인한 수입이 늘어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분야에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3. 전 세계가 경제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각 산업별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해 박근혜 정부는 농업예산을 5조 2천억 삭감하고, 세계개편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농업분야를 축소·왜곡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철학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타결된 한중FTA를 과연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4. 정부발표에 따르면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고 전체 협상품목 12,232개 중 10%인 1,223개를 초민감품목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민감품목 10%를 전액 농업분야로 할당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농정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정부가 누누이 밝혔듯이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거꾸로 가는 농정이 되어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명분도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성명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138-802)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T) 3401-6543 F) 3401-6549

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제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 사감위는 75조에 달하는 불법도박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합법사행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최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불법도박의 뚜렷한 근절 방안이 없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율 축소 등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법적인 경마산업이 우리나라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농업발전에 미치는 순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박산업 규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사감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애초 사감위가 발족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장치가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와 복권방, 인터넷을 통한 불법 토토 등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사감위는 이런 불법도박의 근절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재 레저산업의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경마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초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3. 현재 사행산업 100조원 중 불법도박이 75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8년 1차 조사보다 20%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합법사행산업을 제재할수록 불법도박이 음성적으로 만연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도박은 국가통제가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등 규제 일변도의 제도가 시행되면 축산발전기금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 농촌에 환원되고 있는 ▲농어촌자녀 장학금 지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지원 및 복지물품지원 ▲농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의 공익사업이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도 정부 계획에 따라 농업예산이 5조 2천억원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고, 세재개편안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비과세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 체결된 한미·한EU FTA에 이어 최근 1단계 협상이 타결된 한중FTA로 인해 농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의 방안은 농업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

감위의 경마산업 제재는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인 판단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사감위는 본연의 목적인 불법도박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합법사행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위가 실적쌓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농민단체들은 사감위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9월 13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특수가축협회(무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최범진 사원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가시켜라

- 2014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예산 증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

1.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약 4.6%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어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에 의문을 갖게 한다.
2. 현재 농촌현장은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물가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 • 정체된 반면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많은 농업인이 농가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업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이은 중국과의 FTA 협상으로 농촌현장의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에 그 어느 때보다 농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융자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직접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계는 2014년 농업분야의 예산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이처럼 농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14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 증액과 더불어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약가계부의 철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업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350만 농업인은 예산 편성을 주도한 정부 당국자에 그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며, 향후 한 • 중 FTA 투쟁과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5. 이에, 350만 농업인은 정부의 농업분야 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14년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증가율만큼 4.6% 증액과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최범진 사원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라. -

1. 현재 농촌현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30일 농업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농연을 비롯한 많은 농민단체는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2. 그동안 농업을 배려하진 않은 정부의 물가정책과 농업선진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농가경영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촌현장의 노동력 부재는 더욱 심화되었다.
3. 이에 2012년 11월 김춘진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재를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4. 현재 농촌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후계농업인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 농어촌 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은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농업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350만 농업인은 정부와 정치권이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일시 : 2013년 10월 8일(화)

○ 담당 : 김광천 사무국장(010-3254-8529)

경제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가입을 반대한다.

1.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강대국들이 TPP를 타결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PEC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TPP가입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미국이 금년내로 TPP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정이어서 가입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약 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2.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으로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는 무역협정이다. ▲전품목철폐 원칙 ▲예외품목 사전금지 ▲포괄적 FTA를 목표로 진행중인 협상으로 후발 참가국은 참가이전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들이 합의한 만큼 개방을 전제로 이른바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하는 협상이다. 이에 따라 농업부분 또한 큰 폭의 개방으로 인한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3. 특히 TPP가입은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쌀, 과수·채소류 등 대다수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전가될 것은 자명하다. 기 체결된 한미·한

EU FTA에 이어 최근 농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한중FTA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TPP가입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협상이다.

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TPP협상 참여하는 경우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TPP의 참여가 경제 성장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TPP 협정에 참여하는 7개국과 이미 FTA를 맺어 관세를 추가로 철폐할 여력이 크지 않고, 사실상 일본과 양자 FTA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차 및 부품소재 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정부의 일방적인 TPP 가입은 각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각 산업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산업간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와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TPP협상에 대해 농업계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0월 7일

농 축 산 연 합 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전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고려인삼연합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 쌀 목표가격 법안이 표류 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현장 농업인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

1. 최근 쌀 목표가격 재산정과 관련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종합국감이 파행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쌀 농가 소득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해 온 현장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 우선, 쌀 농가들은 2005년 대비 물가와 생산비가 각각 3.02%, 7.1% 상승하였는데 농가당 쌀 소득은 18.3% 감소하여 많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쌀값 하락에 따른 최소한의 안정 장치로 도입 되었는데, 최소한의 소득안정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 고령화와 함께 쌀 자급률과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식량안보 및 쌀 산업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이와 같은 쌀 목표가격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도 쓴소리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 산출은 수확기 가격변동을 반영하도록 쌀소득보전법(제10조)에 계량화 되어 있어 정부의 재량도 없을 뿐만아니라 국회동의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전에 법률안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법안을 재개정했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4. 만약, 국회와 농업인단체의 주장을 모두 수용 할 수 없다면, 정부도 일부 양보한 쌀 목표가격 인상안 제시와 함께 파격적인 가산직불제 도입 등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와 농업인단체에 대해 공감 할 수준을 제시해야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무튼, 이번 쌀 목표가격이 논란이 확대되어 쌀 목표가격 재산출 법안이 표류 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현장 농업인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함께 일부 보완책을 법안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김수연대리

소비자·농업인을 우롱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농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1. 전남 해남지역의 일부 농협(옥천, 황산)들이 묵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팔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속이고 큰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는 무려 2009년부터 5년 동안이나 이루어져 온 것으로, 수법 또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농협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2. 더욱이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무원이 가담했다는 사실에 농협을 믿고 이용해온 소비자는 물론 현장 농업인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믿고 거래하는 농협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건이 국내 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산 쌀 소비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의 재산정과 관련하여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농업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면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350만 농업인 및 12만 농업경영인들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 농협에 강력히 촉구한다.
4. 또한 조작 가능성이 큰 전산시스템을 방치해온 농협중앙회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난 농심은 향후에 있을 한·중FTA 8차 협상 집회를 기점으로 농협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3년 11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성명서

농업농촌의 푸른 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최범진 대리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증액하라!!

- 배추·무값 폭락과 한중 FTA 추진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

1.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 된 상황에서 정부가 농림축산식품(이하 농식품)분야의 예산을 2013년 대비 0.1%만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4년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4.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3년도의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보다 오히려 2.9%가 줄어든 것이다.
2. 만약, 2014년 농식품부 예산을 확정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무·배추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농업 초강대국인 중국과의 FTA 8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축소는 분노해 있는 농심을 더욱 자극 할 것이다.
3. 또한, 쌀 목표가격 인상 및 가산직불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4.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식품부 분야 예산을 국가전체예산증가율인 4.6%만큼 증액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할 것이며 농업관련 사업 축소 및 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로 향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부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보험가입 절차의 간소화 및 손해평가인 양성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 -

1.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중대형 태풍,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낙과 등 농수산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 재해보험은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물론, 식량주권 확보와 선진 농수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2. 농·어업 재해보험은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도입된 제도로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농수산물, 가축, 풍수해 등 4개 분야 40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작물 1,774억원, 가축 816억원, 풍수해 185억원, 수산 55억원 등 총 2,830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 하지만 관련 보험운영 체제는 ▲농작물은 농협 ▲양식수산물은 수협 ▲가축은 농협과 LIG ▲풍수해는 삼성과 동부에서 제각각 운영토록 돼 있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보험료 인상,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농어업인들이 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특히 재해발생시, 손해평가인의 현장평가가 지연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험을 이용해도 농어업인들의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실정이다.
4. 따라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이용하는 농어업인의 서비스 만족 제고와 재해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운영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농·어업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농작물, 가축, 수산, 풍수해 등 재해보험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험가입 절차의 간소화 및 보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 손해평가인 양성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김수연대리

어려운 서민·농업인들 농락하는 농·축협이 대출금리 임의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 책임자를 즉각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1.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93개 일선 농·축협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4년간 고객의 동의 없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5가지의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임의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CD금리는 2008년 최고 5.69%에서 2009년 최저 2.41%로 하락해 낙폭이 최대 3.28%포인트에 이르렀지만, 이들 농·축협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멋대로 인상하여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관련 상품을 이용해온 서민과 농업인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
2. 현재 한·중 FTA협상, 정부의 TPP 가입을 위한 준비 등 잇따른 농업시장 개방과, 갈수록 높아지는 농가부채, 폭등하고 있는 농업생산비 등으로 크나큰 시름을 안고 있는 농업인에게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농협은 전남지역 농협의 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이미 국민들과 농업인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농협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3. 특히 농협은 지난 해에도 적발된 금리조작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불거져, 국민들과 농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을 대변한다는 농협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서민들까지 속이며 농락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협동조합 및 농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
4. 따라서 농협은 즉각 관련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여신업무를 100% 전산화하여 임의적인 금리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최범진 대리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경영비 축소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1.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평균 3% 인상하였다.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약 2%씩 인상됐으며, 농사용 을(고압)은 기본요금이 5.2% 인상 되었다. 특히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 차등 요금이 적용돼 그동안 1kwh당 39.1원이었던 전력량 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철에는 41.9원, 봄·가을철에는 39.9원으로 여름·겨울철의 인상률은 최대 7.2%에 달한다.
2. 현재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된 반면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농가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3. 특히 농업총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2003년 이전에는 농업총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으로 2011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3.1%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 경영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이에 우리 농업계는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철회와 농업경영비 축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350만 농업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김수연 대리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점점 문닫는 서울대학교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규탄한다!

- 수능최저학력기준 등급을 완화하고, 농어촌학생 정원비율을 유지하라!! -

1. 서울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5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였던 것을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로 대폭 강화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 출신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하여 앞으로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이 더 힘들어 지게 되었다.
2. 특히, 서울대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방침을 내렸지만, 오히려 등급을 강화시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한국대학을 상징하는 대학으로,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사항을 시행할 경우, 타 대학들이 잇따라 시행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커질까 우려되고 있다.
3. 아울러,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는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의 정원이 7%에서 5.5%로 감소되어 잇따른 FTA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 농업생산비 급등, 농산물 가격하락, 열악한 농촌복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농업계가 자녀의 교육으로 더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 이에 한농연은 교육부가 지난 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급을 완화할 것을 서울대학교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어촌학생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의 정원을 종전의 7%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138-802)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T) 3401-6543 F) 3401-6549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핍하하는 사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언론을 호도해 농민단체의 기자회견을 은폐·축소하려는 사감위는 각성하라 -

1.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월 21일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사감위는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여 비대위는 실체가 없이 급조된 조직이며, 마사회의 지시로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의 명분을 빌미로 농민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핍하하고 언론을 조작하려는 사감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사감위가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는 뒤로 한 채 합법사행산업인 경마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마산업이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축산업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기금의 축소로 전가됨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비대위가 사감위를 비판하는 이유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지않고,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3. 비대위는 사감위가 언론에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급조된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2005년 농축산업의 회생방안과 경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후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2007년에는 사감위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회장을 위원장으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간사단체를 역임하였으며, 현 비대위는 '건전경마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현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단체이다. 사감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칭을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지난 기자회견이 마사회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은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왜곡하려는 의도이며,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소속 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

4. 사감위는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감위의 활동이 지극히 편협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은 사감위를 둘러싼 대체적인 분위기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즉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애써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형국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감위에 분명히 밝혀둔다. 더 이상 단체들의 활동을 왜곡하고 폄하하지 말라.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농민단체들은 묵과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감위 해체를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1월 25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화훼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특수가축협회(무순)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광천 실장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6차 산업발전을 위해 식약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악용한 식파라치들의 난립으로, 농산물 자가 생산·가공·판매농가와 소규모 건강원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의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관리기준이 엄격하거나 동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미처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농업인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2. 애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의 목적은 식품제조·가공·판매 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행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부패·변질된 제품의 판매, 표시기준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식품위생법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창출,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위축 및 식파라치의 노림수로 작용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3. 이에 한농연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 2조 지급대상에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로 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등록영업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으로 추가하여 농산물 가공·판매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농산물 제조·가공은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1차적인 목표는 물론 농업 부가가치 증대,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농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업의 생산·제조·가공을 통한 6차 산업화가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인데 반해 현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농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정기조인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고규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광천 실장

정부의 한중일 FTA 3차 협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일본·중국의 농축산물·농식품의 파고에 농업·농촌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이게 돼 -

1. 한중일 FTA 3차 협상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며, 협상 틀과 쟁점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FTA 3차 협상이 최근 정부가 참여 여부를 저울질중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은 물론 한중 FTA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350만 농업인들은 이번 협상을 심각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 애초 한중일 FTA는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EU(유럽연합)를 모델로 설정하여 거대경제권 형성 및 지역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EU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 과거사 인식 문제, 자원 및 군비 경쟁 등 복잡한 갈등 요소가 산적한데다, 3국간 교역구조 또한 치열한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한중일 FTA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특히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및 농식품에 강력한 경쟁력을 지녔던 일본은 물론, 최근 획기적인 품질 개선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한중 FTA를 통해 국내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약진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강행중인 한중일 FTA로 인해 농업·농촌의 위기 심화는 물론이거니와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이 뿌리째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4. 그럼에도 정부는 한중일 FTA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3차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와 함께 한중일 FTA까지 강행하면서 농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5. 만약 한중일 FTA가 기 체결된 FTA 및 내년 쌀 관세화 협상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일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3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성명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광천 실장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제적 효과 불투명, 막대한 농업피해 불가, 사회적 갈등 유발, TPP 가입희망을 규탄한다 -

1. 금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관심을 표명하며,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졸속 공청회를 개최하더니 이윽고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TPP가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관심은 표명한 것이나 참여 확정은 아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대체 누가 이해한단 말인가?
2.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3. 우리나라에 앞서 가입한 일본의 전례를 보면, 가입당시 일본의 주요농산물인 쌀·밀·육류·유제품·설탕 등 5대 민감농산물 절대 개방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TPP참여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TPP가입을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온 식량생산조절정책 제도 폐지 및 농업보조금 축소단계를 밟고 있으며, 11월 26일 TPP협상 당시 자유화율 95%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참여국의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요구로 인하여 목살당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TPP가입에 따른 전면개방의 수순을 보여주고 있다.
4. 'TPP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쳐 경제적 파급

력이 지금처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피해는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와 개방을 부추기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밝힌 긍정적인 부분, 유리한 혜택이라는 해석도 실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이득은 불투명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참여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TPP가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의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5. 정부가 농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농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TPP는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업을 포함하여 개별 산업간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산업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한농연을 비롯한 300만 농민들은 정부의 TPP 참여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TPP 관심 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농업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300만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김수연 대리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침’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전액 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

1. 내년부터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등 대부분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방과후 학교, 예체능 및 영어 체험교실 등 교육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350만 농업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2. 농촌지역의 교육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는 커녕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도시에 대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과 학력저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2011년 33.7%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농어촌 노인의 빈곤율도 도시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농어촌 노인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기재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기재부는 국회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그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
4. 이에 한농연은, 안행부에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앞으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형평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광천 실장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축산업 시장개방 불가, 막대한 농축산업 피해 유발,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규탄한다 -

1. 금일 정부는 한·호주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항목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TPP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를 빠르게 타결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농축산업의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 FTA가 타결되지 않은 지난해 호주와의 교역액을 살펴보면, 29억 9천300만 달러로, 수입액 28억 8천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 600만 달러에 그쳤다. 더욱이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과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3. 특히,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의 38.9%, 뉴질랜드 3.5%를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한·호주 FTA타결 결정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한·미 FTA의 경우 발효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53.6% 증가했으며, 국내 한우 가격은 1.3%, 송아지 가격은 24.6% 떨어졌다.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농축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
4. 한·호주 FTA는 우리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농가와 연결되는 파생산업간 미치는 과급력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농축산업은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은 정부의 한·호주FTA 타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공은 FTA를 체결하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호주 FTA로 발생하게 될 농업의 피해를 무시하고 FTA를 최종 타결할 시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2월 0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김수연 대리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생산자·소비자에 피해가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

1. 우원식 민주당의원(서울 노원을)이 지난 3일 지자체가 특정 품목을 '상생품목'으로 정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이를 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생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어민 등 생산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농산물 품목이 이른바 '상생품목'으로 지자체에서 결정 될 경우, SSM 등 대형마트에서는 지정된 농산물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농산물의 신선도 하락, 농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당장 판로가 막히게 되어 농가소득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이는 현재 잇따른 FTA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안고 있는 농업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또한, 이는 농업인 등 생산자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가 장소, 상표,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는 것이며, 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시조차도 지난 4월 추진했던 '51개 판매품목 제한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는가?
4. 이에 한농연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통법의 본 목적인 취약계층의 보호에 걸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바이다. 만약 농업인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면, 12만 한농연회원들은 전 농업계와 연대하여 거세게 반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성명서

농업농촌의 푸른 꿈!!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http://www.kaff.or.kr>

발행 : 회장 김준봉

담당자 : 정책조정실 최범진 대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승진시험문제 유출 관련 직원의 엄중한 처벌 및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

1.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승진 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350만 농업인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내부 승진시험 문제를 빼돌린 뒤, 돈을 받고 시험지를 판매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직원 윤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윤씨 등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급변하는 농업 현황 속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투명한 인사를 통한 우수한 인재 등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사비리가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 350만 농업인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3. 실제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에도 승진청탁 비리로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비리 척결을 위한 쇄신과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리가 일어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체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벌백계하여 승진의혹이 있는 모든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사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 관련 대상자를 처벌할 경우 한농연을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는 그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묻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개혁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라!!

- 쌀 목표가격 인상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최근 쌀 목표가격 재산정과 관련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종합국감이 파행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쌀 목표가격인 174,083원/80kg에서 179,686원/80kg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도 현장 농업인들의 기대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쌀 목표가격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예산 확보, 한·중 FTA, TPP 참여 등 산적한 농정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이 쌀 목표가격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 상황에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350만 농업인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 정부도 미흡하지만 그나마 성의를 보여 쌀 품목 단체인 쌀전업농도 18만원 수준이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법 체계상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인상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가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3. 만약,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 할 경우 인상안의 예산 반영과 변동직불금 지급에 난항을 겪어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여·야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예산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4. 이처럼, 농업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쌀 목표가격에 때문에 다른 농정현안이 추진되지 못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한·중 FTA협상, TPP 참여 등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농림축산예산 확보와 농업 개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5. 이에,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지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확정하고 정책금리 1%대 인하, 파격적인 동계작물 직불제 도입 등을 법안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국회에서 표류되어 농가들의 피해가 양산 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